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안권 개발 특례 반영 새로운 100년 도약"	1
강원종합뉴스		[문화] 강릉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음악회' 성료[1/2]	2
江原日報		[포토뉴스]원주 강원감영 달빛여행 개막식	4
강원도민일보	02면	오늘 도의회 부의장·기행위원장 선출	4
江原日報	03면	여름방학 마친 자치도의회 오늘부터 의사일정 돌입	5
G1방송	온라인	도의회, 주택 중개보수 지원 조례 발의	6
일간투데이	14면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6
KBS 춘천	온라인	‘급발진 사고’ 예방 잇단 조례...국회는?	7
머니투데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물었다 "정책지원관, 2인당 1명 배정방...	8
江原日報	23면	강원자치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협의회 출범	11
강원도민일보	13면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대체산업 발굴 총력	11
강원도민일보	05면	'천원의 아침밥' 재정난, 한학기 만에 손가락 내려놓을 위기	12
江原日報	14면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거행	12
江原日報	16면	T&U 전국 청소년 가요제	13
강원도민일보	23면	평창서 '차강 박기정 선생 예술세계' 다시 만나다	13
江原日報	10면	석화초교·홍천중 이전, 주민의견 묻는다	14
강원도민일보	23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기원" 강원예술인 모였다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교육계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1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후평2동 주민총회 및 힐링장터	1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속초초 개교91주년 기념 총동문회 체육대회	1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정선군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개최	17
강원도민일보	04면	"교실 지키라더니..." 신경호 교육감 탁구경기 비판	18
강원도민일보	01면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족쇄 풀고 성장 발판 마련	19
강원도민일보	06면	외지인 투자 관심 식었나... 강원 부동산 거래 감소 지속	19
江原日報	02면	박보균 장관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자신”	20
江原日報	01면	4년째 착공 불발 제2경춘국도... 사업비 증액 절실	21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 '바이오·데이터' 기회발전특구 도전	21

江原日報	01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평화경제특구' 설치 대상...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건축부문 공공서 뒷받침 돼야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평화경제특구로 접경지 활력 찾길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 매매시장 되살릴 방안은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의료격차 해소 못 하면 지역 소멸 막을 수 없다	26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지역 12면

“동해안권 개발 특례 반영 새로운 100년 도약”

68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
강릉시민 대상에 왕종배 대표
산불유공자 등 34명에 감사패

강릉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하는 '제68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최근 강릉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권성동 국회의원과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내 기관·단체장,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시민의 날을 축하했다.

제41회 강릉시민대상에는 왕종배 강릉연탄은행 대표가 수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시청직원들은 '더



제68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왕종배 강릉연탄은행 대표에 대한 제41회 강릉시민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큰강릉, 더따뜻한 강릉'이라는 주제로 웰레조화를 실시, 지난 4·11 강릉 산불 재난 극복에 기여한 심규삼 전 강릉소방서장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했다.

또 성금과 성품, 자원 봉사를 펼쳐준 34명의 산불유공자와 모범시민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임영대중각에 강릉시 대표 기관·단체·시민대표들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임영대중타 종식을 진행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은 예로부터 강원의 중심이자 정신 수도 역할을 해오며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돼왔다"며 "민선8기에서 세운 5개분야 5대 달성 지표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달라"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개정 반영되지 못한 동해안권 개발 특례들을 3차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 강릉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기영 시의장은 "시민의 날은 강릉시민 모두의 생일이기에 더욱 뜻 깊은 날이며, 강릉시의 청사진이 조기에 잘 완공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강릉시민들이 강릉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결과 강릉은 전국에서 가장 관광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도시이자 문화도시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저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해 후손들에게 명품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연재 dusdn2566@kado.net

2023년 09월 03일 (일)

문화

강원종합뉴스

[문화] 강릉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음악회' 성
료

재단법인 한국SGI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시민 음악회

송은조 기자

문화예술의 고장인 강릉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음악회'가 2일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내 해람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문화예술의 고장인 강릉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음악회'가 9월2일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내 해람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송은조 기자

재단법인 한국SGI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퓨전 국악, 성악, 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 재단법인 한국SGI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퓨전국악, 성악, 가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 송은조 기자

국악 가수 박유민이 국악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강강술래', '눈먼 코치'를 부르며 흥을 돋우고 가수 최예진의 트로트 메들리, 장혜리의 베이스 메들리 무대로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 국악 가수 박유민이 국악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강강술래', '눈먼 코치'를 부르며 흥을 돋우고 가수 최예진의 트로트 메들리, 장혜리의 베이스 메들리 무대로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 송은조 기자

성악가 이란아, 김태은이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A whole new world' 등을 열창한 데 이어 국악 가수 유태평양, 퓨전국악그룹 '지음'의 협연으로 천 백여 명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 성악가 이란아, 김태은이 영화 알라딘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A whole new world' 등을 열창했다. (사진=송은조 기자)

이어 '낭랑 18세', '소양강 처녀'로 유명한 가수 한서경이 신곡 '첫사랑'과 히트곡 메들리를 부르며 열띤 무대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권성동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의 축사와 김홍규 강릉시장의 영상축사, 권혁열 도의회의장과 김인수 한국SGI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내빈으로 김현영 강원대총장, 권혁중 재경강릉시민회 명예회장, 우승룡 강원일보 강릉본부장, 김용기 법무부 강원동부협의회장과 박호균 도의원, 최승순 도의원, 최익순 시의원, 김진용 시의원, 양희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장, 최준현 위원장, 김형태 민주평통삼척협의회 회장, 최금정 강원여성경영인협회 강릉지부장, 심훈섭 강릉소상공인협회장, 최정운 강릉관광진흥협회장, 이원국 사랑실은교통봉사대 강릉지대장, 윤수현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박정희 화가, 류제경 파마셀대표 외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희망 음악회를 주최한 한국SGI 관계자는 이날 음악회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된 최고의 공연이었으며, 1,000여 명의 관객이 아름다운 선물로 하나 된 희망의 음악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03일 (일)

사회

[포토뉴스]원주 강원감영 달빛여행 개막식



원주 '강원감영 달빛여행'이 지난 1~2일 이틀간 강원감영 특설무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이상현 원주문화원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제5회 인열왕후선발대회와 강원감영국악예술단과 달빛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문화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종합 02면

오늘 도의회 부의장·기행위원장 선출

15일까지 임시회 조례안 3건 심의

11일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 청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4일 개회한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선 부의장, 기획행정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아침식사지원, 교원 무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심의가 이뤄진다.

부의장·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4일 진행된다. 오는 11일엔 제1차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

회가 열린다.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 현지시찰,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위 일정도 예정됐다.

부의장 후보는 한창수 도의원, 기획위원장 후보는 김길수 도의원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초 합의안대로 선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도내 학교 및 기관·단체에 아침식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강원특

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김용래), 김치 홍보 및 유통지원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등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종합 03면

여름방학 마친 자치도의회

오늘부터 의사일정 돌입

15일까지 제322회 임시회
부의장·기획위원장 선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40여일간의 여름 휴식기를 마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4일 오후 3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12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공석이 된 부의장직을 채우기 위한 후속조치가 마무리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장·기획행정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사·보임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장을 사임한 한창수 도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어 강원자치도 지원특위 위원장을 사임한 김길수 도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김길수

도의원이 운영위 위원을 사임하고 기획행정위 부위원장으로 추대된 하석균 도의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 지원특위는 13일 회의를 갖고 신임 위원장을 선임한다.

또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42건을 비롯해 동의안 7건 등 총 55건을 처리한다. 김용래(국힘·강릉) 도의원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해 ‘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 박호균(국힘·강릉) 도의원은 취약계층이 부동산 중개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내 농산물 활용을 돕는 조례도 눈에 띈다. 전찬성(민주·원주) 도의원은 도내 쌀을 활용한 ‘강원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최종수(국힘·평창) 도의원은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된다. 이현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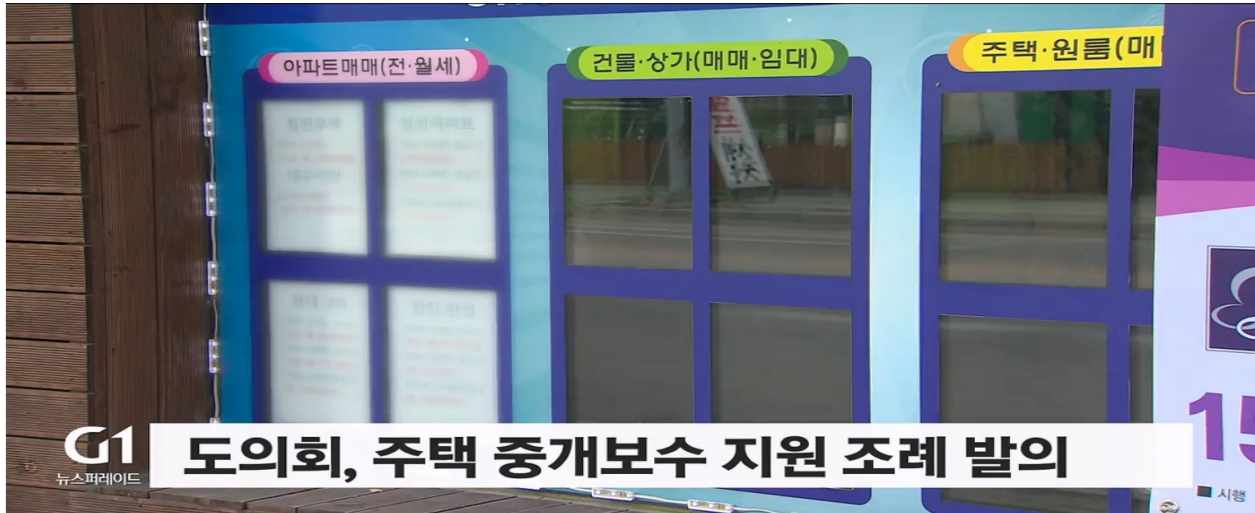
G1방송

2023년 09월 01일 (금)

강원

도의회, 주택 중개보수 지원 조례 발의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도의원이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초년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주택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됩니다.

일간투데이

2023년 09월 04일 (월)

지역 14면

■박호균 강원도의원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도의원(강릉 1)이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비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등)이 겪을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개정하게 됐다.

박호균 의원은 “부동산 중개료의 인상으로 인해 취약 계층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노덕용 기자 nod2015@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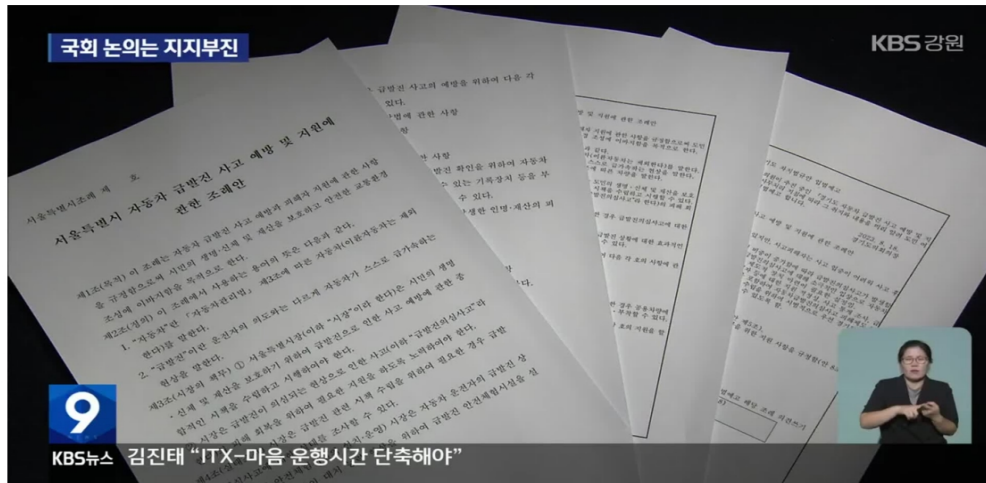
G1방송, 프레스뉴스 등 31개 언론사 보 :



2023년 09월 01일 (금)

강원

‘급발진 사고’ 예방 잇단 조례...국회는?



[앵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고 초기 뜨거웠던 법률 개정 여론도 갈수록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굉음과 함께 질주하던 차량이 지하통로에 추락합니다.

운전을 한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달(8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물론, 공용차량에 별도의 제동 기록장치를 시범 설치할 수 있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기인/경기도의회 의원/조례안 대표 발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 나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조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현이가 가족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집단 자문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래/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피해자가 그 부분(급발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함께 해준다면 피해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반면, 법률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회사에 지게 하려면,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지난 3월, 도현이가 가족의 청원으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일부 거론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현이가 가족 측은 급발진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회가 개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초기 뜨거웠던 관심과 여론도 갈수록 식어가면서, 일명 '급발진 방지법' 법률 개정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2023년 09월 01일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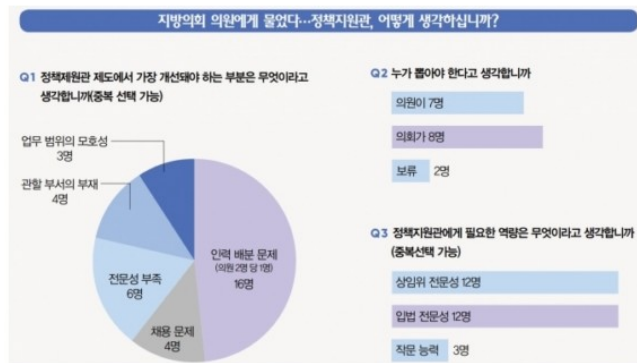
종합

머니투데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물었다 "정책지원관, 2인당 1명 배정방식 개선돼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임윤희 기자, 신재은 기자] [심층리포트]지방의회 싱크탱크 정책지원관 "전문성 보완 숙제 · 기초의회는 인력난"

[편집자주] 지난해 7월 민선 8기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 1년을 넘기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기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직제다. 지방의원 정수(3865명)의 50%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지방의회는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선발, 운용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인력이다. 제도 신설 당시 지역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배치, 채용방식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전국 17곳 광역의회에서 입법활동이 우수한 의원 1명씩을 선정(여야 구분 없음), 정책지원관제도 전반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익명 요구에 따라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



◇정책지원관 제도, '인력 지원' 취지로 도입

정책지원관은 보좌관·비서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됐다. 과거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민원사항 청취, 조례 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발언내용 정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의원이 직접 처리했다. 일부 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추진했지만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방의회 의원에게 대한 의정지원은 입법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광역 시도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입법조사관을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형태로 의정지원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책지원 인력에 대한 지방의회의 요구가 늘어나자 현재의 정책지원관 제도가 탄생했다. 전라남도의회 한 의원은 "지방의원의 경우 대민지원이나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인 자료 수집 등이 부족했는데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한다. 이에 기초의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3월 29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제164차 정례회의'에서 '기초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상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하기도 했다.

◇"시행착오 단계, 제도 정비 될 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전국 17곳 광역의회에서 입법활동이 우수한 의원 1명씩을 선정(여야 구분 없음),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의원 대부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지방의회 의원 17명 중 16명이 정책지원관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전남도의회의 한 의원은 "통상 다른 시도의회는 사례 조사와 상위법 조사, 5분 발언 준비, 시정질문 등을 요청한다"며 "과거에는 자료조사를 직접 해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한 의원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좋다"며 "혼자 의정활동을 할 때는 의견을 교류할 사람이 없었는데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이후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라는 견해도 많았다. 17명의 의원 중 16명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책지원관의 체계적 관리가 법에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배치는 의회마다 다르다. 의회 사무처 소속으로 배치돼 있는가 하면 개별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둔 곳도 있다. 사무처와 위원회 구분 없이 두 곳 모두 배치돼 일하는 의회도 있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법을 만들 때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다룰 건지를 명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지방의회마다 소속된 부서도, 뽑는 방식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지원관이 무작위로 배정되는데 의원들과 호흡이 잘 맞지 않아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지원관을 상임위 소속으로 두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인천시의회의 한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법률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에 정책지원관을 둔 경우 불필요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전시의회의 한 의원은 "이른바 인기 상임위에 배치되기 위해 정책지원관 간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건강한 지원관제도에 방해요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인당 1명 배정 방식'부터 개선돼야"

현재 정책지원관의 수는 지방의원 정수의 절반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원 16명은 '2인당 1명으로 배정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대구시의회의 한 의원은 "의원 2명이 동시에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지원관들도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은 "의원이 어떤 일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 강도가 달라진다"며 "같이 배정된 의원이 일을 어느 정도 요청하는지 알 수 없다. 정책지원관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 일을 많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역시·도 의회와 기초단위의 의회가 동일하게 의원 2인당 1명 채용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의 한 의원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이 7조원이 넘는다"며 "수조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광역시도 의원과 그보다 예산이 적은 기초단위 의원이 동일하게 2명당 1명 추가 배정되는 건 문제"라고 했다.

특정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과중되기도 한다. 울산시의회의 의원은 "말고 있는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질의할 때는 해당 상임위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책지원관 자신이 배정받은 의원 업무와 상임위 요청 업무를 함께할 경우 해당 정책지원관은 사실상 2~3명의 의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지원관제도가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책지원관이 갖는 정치적 중립의무로 인해 사실상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도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원 17명 중 7명은 정책지원관 채용을 의원이 직접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채용 방식으로는 의원들이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책지원관을 뽑았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했고, 대구시의회의 한 의원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수렴, 이를 채용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한 의원은 “사실 필요한 건 정책지원관 제도보다 의원 보좌관 제도”라면서 “보좌관 없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역부족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지원관이 국회 보좌관처럼 운영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의원도 있다. 17명의 의원 중 8명은 지금처럼 의회가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강원도의회의 한 의원은 “의원이 정책지원관을 직접 뽑으면 자칫 ‘자기 사람심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이제 막 정책지원관이 도입돼 의회 위상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데, 또 개정을 하는 것은 설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의 한 의원은 “정책지원관은 비서관 보좌관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시도는 경쟁률 치열한데...기초의회는 ‘인력난’ 심각

지방 기초의회는 경우 정책지원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대전시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5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에 52명이 몰려 10.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진행된 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에는 4명 선발에 46명이 지원해 11.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6명 모집에는 47명이 지원해 7.8:1의 경쟁률이었다. 서울시의회(정원 58명)는 지난해 27명을 선발하는데 194명이 지원해 약 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28명 선발에 171명이 지원, 지난 7월 3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에는 69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비교적 지원자가 많은 광역의회에 비해 기초의회는 인력난에 허덕인다. 기존 인력의 이탈과 신규 채용 지원을 저조 등이 이유다. 지난 3월 대전 중구의회의에서는 지난해 선발한 정책지원관 3명 중 2명이 광역의회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북 김천시의회 역시 지난해 선발한 정책지원관 4명 중 3명이 면직해 추가 채용을 진행했다. 경남 고성군의회의는 3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고자 했지만 적합자를 찾을 수 없어 1명만 선발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지원관도 채용을 포기해 다시 정책지원관 공고를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고성군의회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5개 시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고성군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군의회보다는 광역의회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령군의의회와 하동군의의회에서도 책임자가 없어 정책지원관을 뽑지 못했다. 충남 옥천군의의회는 정책지원관 선발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지원관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전문성·배정방식 개선이 숙제

특히 관련 경력이 있는 정책지원관을 원했다. 현재 정책지원관의 응시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광역의회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광역의회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분야는 국회, 지방의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법인, 연구소 등 다양하다.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정책지원관도 의원의 관심사나 조례 등을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관련 경력이 없는 경우 이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과거에 4급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해 상임위 활동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해당 상임위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책지원관이 많아진다면 의정활동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의 한 의원은 “과거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수준이 올라갔다”며 “정책지원관도 그에 맞게 깊이 있는 제언을 해야 한다. 전문분야에 맞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의원 개인 보좌인력을 갖춰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지금같이 상임위로 지정되는 방식으로는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을 맡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제도부터 갖추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평가해 보좌관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효과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용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스포츠 23면

강원자치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협의회 출범

방기훈 협의회장 추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 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2일 강원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허영(춘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기영·박관희·양숙희 강원자치도의원, 정경옥 춘천시의원, 김미숙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가맹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가맹단체장들이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 등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친목 도

모와 정보 교환 등 상호 교류를 통해 장애인체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올 6월 강릉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방기훈 도장애인농구협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됐고, 부회장에는 복희삼 도장애인배구협회장, 조영복 도장애인태권도협회장, 감사에는 민민홍 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방기훈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각 종목의 선수가 체육활동으로 각자 목표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지역 13면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대체산업 발굴 총력

시, 태백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

이한영·문관현 도의원 참석

기업 유치·광해 복구대책 논의

내년도 예산신청 개선 사업 보고



이상호 태백시장과 이한영·문관현 도의원이 지역 최대 일터인 장성광업소 폐광 대비 대체산업 발굴 등 현안 해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태백시는 최근 시청에서 이상호 시장과 이한영·문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오는 2024년 6월말로 예정된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역량을 높이

이상호 태백시장과 이한영·문관현 도의원은 최근 시청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신성장동력 및 대체산업 발굴, 광해복구 대책 마련에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도전환대상사업예산 신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함태체육관 리모델링, 황지자유시장 아케이드 보

수 등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이 보고됐다.

또 2025년도분 신청 대상인 청정파크골프장, 용연동굴 관광 명소화,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확충, 한국안 전체환관 정원 및 산책길 조성, 365 세이프타운 운영활성화를 위한 소방

안전교부세 지원도 논의됐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국·도비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 차질없는 공모사업 추진, 건축재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호 시장은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라며 “미래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도의원들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 더 큰 태백을 만들겠다”고 했고, 문관현 도의원은 “태백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현안사업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사회 05면

‘천원의 아침밥’ 재정난, 한학기 만에 숟가락 내려놓을 위기

정부 한끼당 1000원 지원 불구
대학 최대 4000원 부담 적자발생
사업 조기종료·한정 운영 계획

대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비 대부분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내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 한라대, 한림대

등 7개 대학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 중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 한 명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 비해 대학의 부담이 커 각 대학 사이에 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내 대학은 많게는 한끼에 4000원에서 적게는 2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A대학은 당초 대학 회계 예산 3800

만원과 발전기금 2500만원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추경을 통해 38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B대학은 1학기에 1만 2300여 명(누적인원)의 학생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으나 이 과정에서 대학이 2500여 만원의 적자를 입었다. C대학은 이번 학기 매일 200명 한정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식비를 6000원으로 책정, 대학이 4000원을 부담한다. D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년 식수인원인 2만 2400명을 전부 채우면 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 상반기

만하더라도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졌다.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끼 식사를 챙길 수 있는 데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도 늘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을 추가 모집했고 전국적으로 모두 145개 대학이 참여했다. 당초 올해 참여 대학이 41곳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규모는 커졌지만 구체적인 지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도내 대학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제주 등 10개 지자체는 ‘천원

의 아침밥’ 사업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은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그냥 안고 가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도 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도내 생산 쌀을 이용할 경우 대학이 진행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민엽 jmy4096@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지역 14면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거행

태백시 위령탑 성역화 추진

【태백】순직 산업전사 위령제가 지난 2일 산업전사위령탑에서 거행됐다.

이날 위령제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이상호 태백시장, 양정식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이한영·문관현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박창규 순직 산업전사 유가족협의회장을 비롯

한 유가족 및 광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순직 산업전사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태백시는 총 425억원을 들여 순직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산업전사위령탑 인근 부지에 순직한 광부의 위패공간 확장과 추모공원, 문화체험관, 참배광장 및 추모전시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광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지역 16면



T&U 전국 청소년 가요제 2023 화천청소년수련관이 주최한 제13회 T&U 전국 청소년 가요제가 지난 2일 화천체육관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출전한 18개팀과 지역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인물 23면

평창서 '차강 박기정 선생 예술세계' 다시 만나다

봉평 콧등작은미술관 내달까지 전시
백범 김구·만해 한용운 작품도 선포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서화가로 이름 높은 차강 박기정 선생의 애국과 예술 정신을 기리는 차강 박기정 작품 기획전 '묵객-차강 박기정의 어제와 오늘 전(展)'이 지난 1일 차강 선생이 평생 머무르며 작품활동을 했던 평창군 봉평면의 봉평 콧등작은미술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10월말까지 열린다.

차강 박기정선양회(회장 정용선)가 주관한 이번 기획전은 '緣, 애국열사들 평창에서 다시 만나다'를 주제로 차강 선생의 서화작품과 근대 서화계의 거장인 추사 김정희, 대원군 이하응, 다산 정약용, 해강 김규진을 비롯 애국열사들로 지사화가(志士畫家) 불려지는 일송 김동삼, 만해 한용운, 백범 김구 선생의 작품을 함께 전시, 높은 예술세계를 비교 조명한다. 전시전에는 차강 선생의 서화작품 '석란도 10폭 병풍' 등 20여점을 비롯 백범 김구의 서예작품 '강동월이석', 대원군 이하응의 '서예



차강 박기정 작품 기획전 '묵객-차강 박기정의 어제와 오늘 전(展)'이 지난 1일 평창군 봉평면의 봉평 콧등작은미술관에서 개막했다.

대련', 추사 김정희의 '간찰', 만해 한용운의 '오도송 6폭 병풍' 등 모두 3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성기 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지광천도의원, 장정룡 건강릉원주대 교수, 이정동 대곡고미술연구회장, 심상덕 무위당사람들 이사장, 차강 선생의 후손과 제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차강 박기정선양회 정용선 회장은 "차강 선생은 구한말 당대에 이미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불운에 맞서면서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며 "이번 전시전을 계기로 차강의 작품세계가 제대로 조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지역 10면

석화초교·홍천중 이전, 주민의견 묻는다

이달 설문조사 실시 ... 관련 예산 추경 편성

홍천중·여중 남녀공학 전환여부 의견 수렴

【홍천】홍천 석화초교와 홍천중 이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가 이번 달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홍천중과 홍천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홍천군은 '학교이전 설문조사'를 위한 예산 2,000만원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군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군, 홍천교육지원청, 학교이전추진위원회 등은 곧바로 설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석화초교 이전 △홍천중 이전 △홍천중과 홍천여중 남녀공학 전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초교는 건물의 노후화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 70%가 거주하는 신(新) 갈마지구에서 석화초교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홍천중 역시 홍천고와 같은 장소에 병존해 발생하는 일과 시간 차이, 운동장 사용 문제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군과 교육청은 학교 이전과 함께 홍천중과 홍천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 이후에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학교) 전략적 재배치 방안 용역 △교육환경평가 △중기재정계획 반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 △예산 편성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욱(도의원) 학교이전추진위원장은 "현재 갈마지구의 홍천여중과 홍천중이 연봉리로 이전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학교 선택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 통학거리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회, 재학생,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 이전 및 남녀공학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위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인물 23면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기원”강원예술인 모였다

정선서 제61회 강원예술제 개막
우수 예술인 시상 등 화합의 장
생활예술축전 대상 '바람소리'
7일까지 강원사진전·시화전 등



제61회 강원예술제가 지난 1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이재한 강원예총 회장과 12개 지역예총 회장 및 9개 협회장, 최승준 정선군수, 정선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를 함께 기원했다.

강원지역 최대 규모의 예술행사인 제61회 강원예술제가 지난 1일 아리랑의 고향 정선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강원예술제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기원'을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정선에서 이어진다.

지난 1일 정선농협 한우타운에서 열

린강원예술인대회는 이재한강원예총 회장과 12개 지역예총 회장 및 9개 협회장 등 강원예총 리더를 비롯해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회장, 김기철·박기영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예술인 대표자 평가대회, 우수 예술인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또 정선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개막 퍼포먼스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 정선아리랑을 선보였고, 가리왕

산 해맞이 축제 남송과 강원예술인의 마음을 담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기원 샌드아트가 이어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2일 현장을 찾아 강원예총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강원미술협회 회원전과 강원사진전, 강원사랑시화전을 관람했다. 이들 전시는 7일까지 이어진다. 같은 날 도내 신인인과 기성 음악인들이 협연한 강원음악회, 지역의 고유 정서를 녹인 무용작품들을 선보인 강원무용축전도 진행됐다. 3일 정선공설운동장에서는 강원예총이 올해 처음 마련한 강원생활예술축전이 열려 18개 시·군 동호회들이 열띤 무대를 선보였다. 경연 결과 대상은 춘천 바람소리, 최우수상은 홍천 썬

타임즈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핏팝스 빅밴드(원주), 풍물도담(영월), Band EAA(정선), 나래우리 무용단(평창)이 뽑혔다. 이날 저녁 강원주부가요제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강원예술제가 더욱 많은 도민들과 함께 하고, 예술인들이 화합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준 군수는 "6000여 문화예술인과 강원도민 모두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에 힘을 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한 회장은 "강원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공유하는 장으로 삼아 문화예술로 도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주현·김여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오피니언 19면

교육계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의정칼럼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 제정되고, 2023년 6월 11일 그 시행을 보게 되어 우리 강원도민이 그토록 바라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 후인 2024년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진태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누누이 밝혔듯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강원특별법)'은 전 강원도민이 남녀노소, 여야 진영을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 일궈낸 커다란 성과이다.

그러나, 여기 한 발 더 들어가 발견되는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강원특별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와 시·도교육청 간의 감사

권한에 대해 지속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감사위원회의 감사 권한이 도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학교까지 미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는 1991년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자치와 구분되는 영역으로서의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자치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교육당국은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활동의 위축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려운 듯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강원특별법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편 제3장 교육환경 조성 장에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규정(제21조부터 제28조)을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 소관 사무의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감 소관 사무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시행작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및 향후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게 되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100년을 책임질 중차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교육이 교육으로서 교육답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하나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3일 (일)

지역

후평2동 주민총회 및 힐링장터

오세현

후평2동 주민자치회(회장 엄상필)는 지난 2일 옛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주차장에서 허영 국회의원, 박기영 도의원, 김보건·김지숙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민총회 및 힐링장터를 열었다.



▲ 후평2동 주민자치회(회장 엄상필)는 지난 2일 옛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주차장에서 허영 국회의원, 박기영 도의원, 김보건·김지숙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민총회 및 힐링장터를 열었다.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3일 (일)

지역

속초초 개교91주년 기념 총동문화 체육대회

유승현

홍천 속초초(교장 최종석) 개교 91주년 기념 총동문화 체육대회가 지난 2일 영귀미면체육공원에서 허남영 동문화장, 신영재 군수, 홍성기 도의원, 박영록 군의장, 이현삼 충북방송 회장, 동문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홍천 속초초(교장 최종석) 개교 91주년 기념 총동문화 체육대회가 지난 2일 영귀미면체육공원에서 허남영 동문화장, 신영재 군수, 홍성기 도의원, 박영록 군의장, 이현삼 충북방송 회장, 동문화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yoosh@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3일 (일)
지역

정선군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개최

유주현

제17회 정선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가 3일 정선 신동읍 예미초 운동장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정연원 경찰서장, 이종식 군자율방범대장, 20개 각 읍면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제17회 정선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가 3일 정선 신동읍 예미초 운동장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정연원 경찰서장, 이종식 군자율방범대장, 20개 각 읍면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제17회 정선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가 3일 정선 신동읍 예미초 운동장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정연원 경찰서장, 이종식 군자율방범대장, 20개 각 읍면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joohyu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종합 04면

“교실 지키라더니...” 신경호 교육감 탁구경기 비판

도내 교원단체 “부적절한 행동”

도교육청 “분노·항의 겸허히 수용”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 후 매주 주말마다 전국 교사들이 서울에서 추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횡성에서 열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현장에서 탁구를 친 사실 알려지자 이를 두내 강원교사노조, 전교조 강원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손민정)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일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선택이 알려진 후 전국 선생님들이 7번째로 모여 추모와 교육정상화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는 날이었다”면서 “최근 6학년 담임을 맡았던 두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이 추가로 전

해지며 강원도내에서도 평소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7차 집회에 참여했다. 그런 날 강원교육수장인 교육감이 즐겁게 탁구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유감”이라 밝혔다.

전교조강원지부(지부장 진수영)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30만이나 되는 교사가 모여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는데, ‘교실을 지키라’던 교육감은 흥이나 탁구나 치고 있는 모습에 배신감과 허탈감, 모욕감까지 느낀다”면서 “신경호 교육감은 대회 격려차 조용하게 방문한 것이 아니라 탁구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본인의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항의를 오롯이 받아야 하는 것도 교육청의 자세이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원단체의 성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종합 01면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족쇄 풀고 성장 발판 마련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도내 6곳 포함 전국 15곳 지정
경제자유구역 유사 혜택 부여
철원 바이오·고성 관광 등 특화

분단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중첩규제를 감내해왔던 강원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로 탈바꿈한다. 일명 '접경지역판 경제자유구역'인 평화경제특구는 산업특구·관광특구 조성 등이 가능해져 강원 접경지역 발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 및 개선이 이뤄지게 된 만큼 접경지역 일대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새로운 형태의 접경지역 경제발전 로드맵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인접지역'에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제강

화·웅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이 포함됐다. 또한 춘천시와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도 포함, 총 15개 시군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 운영될 전망이다.

시행령엔 평화경제특구 입주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분야 기업으로 규정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내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탈바꿈할 준비를 본격화한 가운데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는 특구 조성 계획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철원군은 농·생명바이오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산업특구 방향으로, 고성군은 철도·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안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특구 조성계획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도내 접경지역은 2027년 동시개

통을 목표로 한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등 철도망을 연계해 평화경제특구 계획을 짜

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관광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경제 06면

외지인 투자 관심 식었나... 강원 부동산 거래 감소 지속

1~7월 외지인 거래 비중 21.56%

아파트 매매 전년비 3299건 ↓

정부, 수도권 부동산 대책 시사

비규제 지역 이점·대출 혜택 전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원지역에 대한 외지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강원지역 아파트·토지 매매 등 부동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7월)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9010건) 중 외지인 거래는 1943건(21.56%)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 외지인 토지·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출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토지		
	아파트 매매거래(건)	외지인 거래(건)	외지인 비율(%)	토지 매매 거래(필지)	외지인 거래(필지)	외지인 비율(%)
2021년	3만508	1만2112	39.70	11만1878	5만1005	45.59
2022년	1만7187	5502	32.01	7만8231	3만3897	43.32
2023년 (1~7월)	9010	1943	21.56	3만7218	1만4520	39.01

도내 부동산의 외지인 거래 비중은 지난 2021년 39.70%에 달했으나 수도권 중심의 정부 대책과 높은 아파트 가격 등으로 인해 강원지역 외지인 투자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1만7187건)의 경우 강원지역에 대한 외지인 거래 비율은 32.01%

(5502건)로 집계, 전년 대비 7.69%p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1.56%로 전년 대비 10.45%p나 감소했다.

이같이 외지인들의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도 올해 7월 누계 1만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1만2309

건) 대비 4분의1 수준인 3299건(26.80%) 줄었다. 특히, 지난 2021년(1만7763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8753건(49.27%)이 줄었다.

토지 매매거래도 같은 흐름이다. 올해 강원지역 토지 매매거래(3만7218필지) 가운데 외지인 거래는 1만4520필지(39.01%)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엔 11만1878필지 중 5만1005필지(45.29%), 지난해 기준으로는 7만8231필지 중 3만3897필지(43.32%)였다. 토지 매매거래와 외지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지역에 대한 외지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중, 서울 등 수도권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혀 강원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강원지역은 정부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비규제지역의 이점이 사라진데다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혜택도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대해 원주의 A공인중개사는 "2년 전엔 외지인 투자자들이 몰려와 매매가격을 많이 올렸고 당달아 전세 가격도 치솟았다"며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경우, 도내 투자심리 하락 기조는 장기화되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우진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종합 02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 컬링센터를 방문, 진종오 강원2024조직위원장과 김철민 사무총장,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및 팀킴, 조직위 관계자 등과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박보균 장관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자신”

강릉 방문 준비 상황 점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강릉을 방문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자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사용할 로커룸과 메디컬룸, 도핑룸을 확인한데 이어 강릉 컬링센터의 경기장 빙질 등 내부시설을 살폈다.

박 장관은 “잼버리 대회 초반의 아

쉬움이 강원2024 대회 때는 재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남은 대회 준비 기간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2024’는 세계 스포츠 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와 조직위, 강원특별자치도가 ‘원팀 정신’으로 무엇보다 국민과 강원도민, 미래세대와 함께 강원2024를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진종오 강원2024대회 조직위원장과 김철민 조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팀킴’ 강릉시청 컬링팀과 ‘강원2024’ 홍보대사 발레리나 김주원, 배우 박재민 등이 함께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조직위·강원자치도와 함께 ‘강원2024, 함께 빛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100일간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연아(강원2024 홍보대사)·이상화(강원2024 조직위원장)·최민정(강원2024 홍보대사)이 릴레이 홍보의 스타트를 끊는다.

류호준·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종합 01면

4년째 착공 불발 제2경춘국도 ... 사업비 증액 절실

2019년 사업 확정 이후 노선 갈등 겪으며 공사 지연
총 사업비 부족 시공사도 못 찾아... 5천억 추가 요청
협의 마무리돼야 내년 '첫삽' ... 재정당국 설득 총력

속보=제2경춘국도 건설공사가 사업 확정 4년8개월째 첫 삽도 못 뜬 채 지연(본보 7월5일자 1면 보도)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총 사업비 5,000억원의 증액과 내년도 공사비 500억원 반영을 요청하는 등 재정 당국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는 2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안으로 설계가 모두 끝나 내년에는 실제 공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억원은 현장사

무소도 짓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시공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

사업비와 시공사 확보조차 못 한 이유는 부족한 총 사업비 탓이다. 제2경춘국도의 총 사업비는 1조2,862억원으로 2019년 확정됐다.

이후 강원도, 춘천시, 경기 가평군 간 노선 갈등이 불거지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됐다.

춘천은 서울-춘천 최단거리 관통을, 가평은 도심 통과를 각각 요구하면서 조율에 1년 이상을 허비, 사업비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더욱이

4년 넘게 사업이 미뤄지며 물가가 크게 인상됐음에도 총 사업비는 동결됐다. 시공사들이 적자시공을 우려해 사업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건축재정 기초까지 겹쳐 총 사업비 협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 중 총 사업비 협의만 마무리될 경우 내년 사업비 추가 확보와 내년 하반기 극적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인 증액 필요성을 건의 중이다.

다만 도와 원주국토관리청은 총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내년 국비를 반영한 점을 볼 때 정부의 추진 의지만큼은 확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내년도 반영된 국비 200억원은 4개 공구에 5억 원씩 착수비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착공을 앞당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내 총 사업비 협의 완료 시 내년 사업비 추가 확보 방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총 사업비 증액 시 사업 착공과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기영·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지역 10면

춘천시 '바이오·데이터' 기회발전특구 도전

특구 수요조사서 도에 제출
지정엔 규제 특례·재정 혜택
도내 지자체 6곳 경쟁 치열
면적 할당 사업 집중도 좌우

춘천시가 기회발전특구에 도전한다. 바이오와 디지털바이오·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 관련산업 유치와 인구유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 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기회발전특구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기회발

전특구는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 신·중설 투자 시 영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는 10년 간 100% 경감, 이후 10년 간 50%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재정지원도 확대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고 특구 내 기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춘천시의 역점분야는 바이오와 디지털바이오, 데이터다. 광판리에 조성을 추진 중인 기업혁신파크와 후평일반산업단지·거두농공단지·거두일반산업단지·강원대학교,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가 조성 지역이다. 춘천시는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진단기술, AI신약, 정밀의료, 디지털치료제 등의 핵심분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형 디지털바이오 인재양성과 고령·은퇴자 복합단지 조성도 추진전략 중 하나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더존비즈온을 비롯해 지역내 병원 등도 협력

한다. 정점은 부지 면적이다. 춘천을 비롯해 6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제출, 내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시·도별로 100만평~200만평 규모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가 제출한 면적은 183만평이다. 확보된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집중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도간 면적 상한선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춘천이 많은 면적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종합 01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평화경제특구' 설치 대상지 선정

통일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세제 혜택·자금·기반시설 지원
道 내년 상반기 철원·고성 신청

속보=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대상 지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6개 시·군과 경기·인천 시·군 포함 총 15개 자치단체가 사실상 결정됐다.

통일부는 지난 2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본보 5월31일·6월2일자 1면 등 보도)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은 강원자치도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춘천 및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까지 총 15곳이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평화경제특구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 수행 기업과 남북 협력사업 승인 기업,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 과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 등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0일까지이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14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 강원자치도는 내년 상반기 중 철원과 고성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해 지역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철원은 첨단산업특구, 고성은 관광특구를 컨셉트로 잡았고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당은 접경지가 북한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통일시대와 국토 균형발전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무현기자·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사설/칼럼 19면

건축부문 공공서 뒷받침 돼야

-7월 민간수주액 작년보다 90%감소, 돌파구 필요

올들어 강원지역 건축과 토목 등 건설업계 수주액이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수주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하락세가 컸습니다. 신규 주택과 숙박시설 등 민간 수주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건축은 작년 7월 실적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철도와 궤도 시설 및 항만·공항 건설 등 공공부문에서 수주가 늘어난 토목업계는 일부 민간 감소분을 메우고 있지만, 건축부문은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통계지청이 내놓은 '7월 강원 산업활동동향' 분석에 의하면 건설업계 누적된 수주실적은 2조 9057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25%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비수기인 1, 2월뿐만 아니라 6월을 제외하고는 7월까지 내내 작년보다 마이너스 실정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회복에 이르기엔 여러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라서 악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도내 일부 신규 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달간 미분양 증가율이 가장 높게 오른 지역으로 꼽힌 점도 부정적 신호입니다.

민간경제와 직결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역시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줄었습니다. 음식료품은 물론 신발 가방, 가전제품, 옷, 화장품, 취미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전상품 감소로 드러났습니다. 올들어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지수는 2020년도보다 내내 미치지 못해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읽힙니다.

관광산업에 이어 비중이 큰 건설업계 특히 건축부문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한 정책적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우선 민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설 때까지 공공부문에서 수주액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부진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 건설 유치에 주력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유치 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지역업체진작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합니다. 건설업계와 적극소통을 통해 수주에 따른 신규 정책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특이현상을 방지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는 각 부문고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주액이 작년 4분의 3에 불과하다면 세밀히 짚어 대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4일 (월)

사설/칼럼 19면

평화경제특구로 접경지 활력 찾길

-도내6개시군 특구가능, 경제 희생 호기

춘천을 포함한 도내 접경지가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부대 폐지와 인구 소멸로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가 특구 운영으로 활로를 찾기를 바랍니다. 도와 지자체는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작업을 서두르고, 이에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 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과 함께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습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5개 시군이 대상 지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침체한 접경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호재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르면 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과 자

금지원, 기반 시설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주 대상 기업은 남북교역수행 기업과 남북협력사업 승인 기업입니다. 또한 이들과 결합해 경제적·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재·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서비스, 관광 분야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철원과 파주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부흥의 발판으로 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강원 등 각 접경지역이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오는 10월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입주 기업에 북 교역 수행 기업은 물론, 연계 기업까지 포함돼 접경지 경제 회생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관건은 이런 정책적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특별 구역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등 유치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도내 6개 시군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사설/칼럼 19면

도내 미분양 주택 증가, 매매시장 되살릴 방안은

도내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3,324호로 전월보다 35.1%(863호)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올 1월 3,556가구를 기록한 이후 6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다 7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곳은 도를 비롯해 제주(20.7%), 광주(8.6%), 충남(0.6%) 4곳뿐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미분양 주택 수는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다. 강원지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건설사들은 자금 회수를 못 해 경영난에 빠지고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집값 폭락 탓에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분양 급증이 주된 미분양 증가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올 들어 7월까지 도내 누적 공동주택 분양은 4,391가구로 전년 대비 81.1%나 폭증했다. 반면 도내 주택 매매량은 지난달 1,833건으로 전월 대비 10.4%, 전년 동월 대비 2.9%가 각각 감소했다. 주택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택 거래가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만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도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전국 주택시장 전망이 지표와 달리 그리 밝지는 않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미 미분양 확산을 막는 정책 효과가 서울 등 일부에 머무른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에 미분양이 쌓일 조짐이 보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감소가 예년보다 분양이 적어서 나온 착시효과라는 평가도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역경제의 우환으로 또다시 부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견사업자가 집중된 도내 주택시장,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등 부동산시장 리스크는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도내 주택 인허가는 올 7월까지 누계 기준 9,2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는 더 증가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부합한 아파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다 정교하고도 미세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4일 (월)

사설/칼럼 19면

의료격차 해소 못 하면 지역 소멸 막을 수 없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수 감소로 의료서비스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접근할 수 있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형평성 있게 공급되며, 양질의 진료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은 의료서비스의 시의성, 형평성, 품질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어 수도권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 10명 중 1명(12.3%)은 30분 이내 응급실이 없는 곳에 거주한다. 전국 인구 평균(4.1%)에 비해 4배나 높은 비율이다. 11.

5%의 아동은 1시간을 이동해도 소아청소년과에 갈 수 없는 곳에 산다. 서울시내 어린이들은 겪지 않는 일이다.

수도권 인구는 2020

년 전국 인구 비중의 과반(50.2%)을 차지한 뒤 2022년 50.5%까지 증가했다. 같은 시기 강원자치도 내 인구는 156만172명에서 155만6,970명까지 줄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은 지역 의료 인프라를 빨아들여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농촌이나 섬 등 의료취약지역 최소화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시간적·물리적 차이를 완화해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관행적 의료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문 의료 및 비대면 진료의 확대와 연계, 관련 의료기관·지자체

간 협력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이 방식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과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조건은 의사 확충에 있다. 사회적 인프라 문제인 의사 확충 논의를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즉, 의료 정원 정책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선 다 그렇게 한다. 의사 부족은 국내의

통계로 입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한참 적다. 서

도내 10명 중 1명, 30분 이내 응급실 못 가

수도권 대형 병원, 지역 의료 인프라 빨아들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대 정원 늘려야

울대 교수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원을 받아 연구한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체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부족은 2030년에 5만67명, 2050년에 10만7,548명으로 예측됐다. 그런데도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 5%씩 증원해 4,303명이 입학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의대 증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한다.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최소 1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 조정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